

환경보전과 기업의 대응자세



이 상 곤 / 한국환경경제학회장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I. 환경문제의 실상

지난 수년간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역사적인 근원은 차치해놓고라도 세계의 환경움직임을 정리해보면, 이미 1960년대/1970년대초에 공해문제와 저개발국의 인구증가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있었다. 1973년과 1979년의 두차례 석유파동은 이러한 공해·인구문제에서 세계의 관심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급균형이라는 데로 돌려 놓았다. 물론 광의 의미에서 에너지·자원문제도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관계가 깊으나, 일반적으로 오염문제, 생태계 파괴에서 오는 피해 또 이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과 제약등에 대한 논의를 우리는 환경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70년대의 에너지 파동에서 벗어나서 80년에 접어들면서 세계환경문제는 새로운 모양으로 나타났다. 局地的인 오염문제, 환경파괴 그리고 인구증가에서 오는 빈곤, 성장 장애의 문제보다는 지구대기 오염에서 오는 온난화현상, 오존층의 파괴, 種의 보존등의 전지구적인 차원의 문제가 주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과학과 기술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단 처리·예방기술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제약을 뛰어넘는 제품의 개발에 관련된 기술등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세계정치구도에서 양극체제가 붕괴되고, 동구의 개혁과 더불어 이제 이데올로기경쟁은 종식을 고했다. 그 공백을 메꾸는 것으로 민족문제, 종교분쟁과 더불어 환경문제에 대한 도전이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의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세계환경문제는 지구환경보전의 당위성과 아울러 선진국에 의해 적지않은 부분에서 정치, 경제의 전략적인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국내의 환경문제는 어떠한가. 지난 30여년동안의 제조업중심의 수출전략에 의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소비증가를 요구했고 불균형성장전략은 권역별 국토계획, 공업단지조성과 맞물려 들어갔다. 결국, 오염배출의 양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화, 인구집중, 자원평가의 미비등으로 인한 지역적 오염의 집중때문에 우리의 오염실태는 지금 많은 사람이 염려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80년대초까지 성장위주의 思考와 정책방향, 그리고 권위주의적 정치·사회분위기는 환경문제의 논의조차 어렵게 했다. 붓물터지듯 터져나오는 近者의 여러환경사고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환경오염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산업현장 도처에 잠재되어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우리는 경제·사회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할만큼 임금구조의 변화, 기대심리의 팽배, 개인권리에 대한 욕구의 급작스러운 증대, 민주화에 대한 요구로 충만되어 왔다. 이러한 전환기에 시민들의 환경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왔다. 이를 타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모두 환경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지 오염배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데는 진지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 많은 환경관련운동단체들은 실천운동과 교육 보다, 감시·고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환경정책·행정비판, 기업의 불법성, 비윤리성에 대해 비

난을 증폭시켜왔다. 물론 정책을 개선시키는 데 그리고 기업의 환경에 대한 태도를 피동적이거나 바꾸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환경정책 강화 또한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I. 기업의 대응자세

이상의 환경현실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활발해지는 환경이슈 그리고 이와관련된 수입규제 움직임, 국내적으로 그동안 묶여있던 환경오염문제가 터져나와 대부분의 비난이 기업에 쏟아지고 있다. 즉 오염발생원인이 “구조적”으로 따져지지않고 “현상적”인 책임을 묻는 경향이 크다. 게다가 수출, 또는 임금등 여타 경제여건이 순탄한 것 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환경문제때문에 좌절하거나, 닥치는 것을 외면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선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대응해야하겠다. 단기적으로 공해유발과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를 그치는 일이 그 첫째라고 생각한다. 만약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이나 규제는 시행을 촉구토록 가능한 채널을 통해 시도해야 하겠다. 또한 공해처리·예방시설에 대한 정부의 세제·금융지원의 효율적인 확대(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예방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정부주도하의 환경기술개발·보급등을 요구하고 이를 적극활용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의 환경정책이 개선되어 완전하진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체계적인 모양을 갖추것 같다. 앞으로의 환경정책방향은 기준강화, 사전예방, 오염자부담원칙, 중장기적 접근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한 기



66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대응은
 준법성·합리성의 단계에서
 윤리성에 입각한 자율적 차원으로
 발전되어야하고, 더 나아가서
 환경문제를 새로운 기업발전과
 도전의 기회로 삼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필요로 한다.

77

업의 중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업의 피동적인 반응이 아닌 최소한 정책추진 속도와 같이 움직이는 자세가 요구된다. 첫째 기업은 나름대로 환경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출판해서 內·外部로 배포해도 좋다. 왜냐하면 일종의 남과 자신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에 부합되는 여러 프로그램을 수립, 실천하도록 하면 더욱 바람직스럽다.

둘째, 환경과학과 기술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단 처리·예방기술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제약을 뛰어넘는 제품의 개발에 관련된 기술등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적절한 기업內의 자원배분, 조직, 인사구조개편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환경관련문제의 핵심을 계속 관찰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환경문제가 중요하지만 여기에도 先後가 있고 중요성의 강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시기에 따라서 변한다. 앞서들은바와 같이 세계적인 큰 환경관심사 70년대初와 지금이 다른바와 같이 앞으로 다른 이슈가 더 크게 부

각될 수 있다. 이는 국제정치 움직임, 교역구조등과 관련이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여타 경제·사회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쨌던 기업으로서의 예의관찰, 예측과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

넷째, 사회의 다른구성체와 긴밀한 유대를 다져야 하겠다. 이말은 시민단체를 회유해서, 또는 정책당국자에게 간청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역할과 견제의 유지를 통해 사회전체에 관련된 환경보전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말이다. 단기적으로는 환경문제의 해결에서 각구성체가 상충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超長期를 들먹이지 않고 중기적으로만 보더라도 환경에 관한한 같은 배에 탕다는 인식을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 해석과 해결방법이 다를 뿐이다. 근자의 환경관련 시민·사회운동은 감시·고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 교육의 분야까지 변져나가는 경향이 있다. 환경오염에 관한한 모두의 책임이라는 자각이다. 기업으로서도 이에 걸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와의 관련에서도 그렇다. 세계적인 환경문제 해결에 우리나라가 지구의 한구성원으로 당연히 기여해야 하겠지만, 전략적인 분야에서는 마땅히 전략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이때 정부와 기업의 연계가 특히 필요로 되고 있다.

Ⅲ. 맺음말

우리나라의 기업을 일률적으로 취급할 수는 없겠다. 세계곳곳의 그룹기업부터, 종업원 2~3명의



가내수공업수준의 기업에 같은 논리와 설명을 적용시킬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분별로 최첨단부터 노동력위주의 기업이 병존하고 있다. 환경과 관련해서 거의 공해 배출이 없는 지식산업부터 공해多배출업종, 또는 환경산업까지도 망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들은 기업의 중장기적 대응 자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네가지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여겨진다. 이같은 원칙에 입각해서 각기업의 형태에 맞는 細部전략이 세워질 수 있다고 본다.

덧붙여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윤추구가 기업의 존재이유임은 누구도 부정치 않는다. 그래서 기업활동을 통한 고용·부가가치 창출이 기업의 主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들, 특히 대기업(또는 업계)의 사회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영향력은 단순한 기업활동의 영역을 넘어서 막대한 것을 알수 있다. 여기에서 기업의 사회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책임의 문제가 대두된다.

단순히 환경관련법적규제, 행정지도만을 가지고는 환경오염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없다. 어디든지 虛點이 있어서 기업의 "범만준수하면 된다"는 태도로는 효율적인 오염방지가 어렵게 되기 마련이다.

좀더 요구한다면 기업의 미래지향성을 요구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어떠한 조직과 비교해도 인력면

에서, 효율성면에서, 순발성면에서 기업은 가장 미래지향적인 집단이 될수 있다. 앞으로 우리앞에 전개될 후기산업사회는 "환경혁명"의 시대라고 불일만큼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활, 사회의 전반에 영향을 주게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경향이 이미 可視화된지 오래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미래지향적인 자세와 역할은 自明해진다.

요약하자면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대응은 준법성·합리성의 단계에서 윤리성에 입각한 자율적 차원으로 발전되어야하고, 더 나아가서 환경문제를 새로운 기업발전과 도전의 기회로 삼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필요로 한다.